

제1세션 : 경제위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제1세션 토론

□ 제1세션 : 경제위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 ◆ 사회자 윤 영 진 (계명대학교)
- ◆ 발표자 박 성 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전략 및
 성과”
- ◆ 토론자 곽 채 기 (동국대학교)
 손 희 준 (청주대학교)
 양 심 목 (전라북도 예산과장)

-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 ◆ 사회자 윤 석 완 (전북대학교)
- ◆ 발표자 이 인 재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추진단장)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의의”
- ◆ 토론자 강 인 재 (전북대학교)
 염 명 배 (충남대학교)
 윤 인 휴 (전라남도 경제통상과장)

제1세션 : 경제위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 사 회 (윤영진, 계명대학교)

안녕하십니까!

경영대 행정학과의 윤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1세션 제1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지방재정세미나는 행정안전부가 후원을 하고, 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재정학회의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특히 관과 학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하는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합니다마는 또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현을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97년도 IMF 경제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특히 중요한 조기집행문제와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될 희망근로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제1세션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재정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안정화 기능은 중앙재정보다는 지방재정이 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인 박성환 과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순서대로 동국대학교 광채기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대학교 손희준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양심묵 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한 20분 정도로 짧게 발표를 하시고 토론자와 또 여러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박성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 주제발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전략 및 성과

[자료 참조]

□ 사 회 (윤영진)

감사합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발표를 교수들보다 더 잘하셔서 교수들 설 자리가 위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에 두 분 교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양심목 과장님께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집행부서에서 실제로 실행한 전라북도 사례에 관한 이야기로 토론을 하실 것 같으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피해주시고,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심목 (전라북도 예산과장)

전라북도 예산과장을 맡고 있는 양심목입니다.

조기집행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실무적인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테고, 또 고생한 것을 토대로 성과를 많이 낸 기쁨도 느끼고 또 평가를 통해서 재정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또 광역시도도 있고. 실무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전라북도가 지리적으로 광주 지역과 가까운 면이 있어서 아마 전라북도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례는 전라북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느낀 바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3관왕이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 관선시대 때 내무부 시절 때는 국가의 철학을 지방까지 일사분란하게 추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95년 민선이 도입된 이후에 아마

2002년 월드컵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기집행이 청와대에도 행정안전부의 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지방도 부단체장을 책임자로 해서 상황실을 설치하고 1일 추진체계를 접수받고 해서 독려를 했던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이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 행정의 위력과 행정안전부의 추진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차원에서 빛을 얻어가면서까지 지방의 재정지출을 확대해라, 이렇게 독려를 해서 각 광역이나 기초 모두 추경도 아마 가장 빠른 시기에 했던 것 같습니다. 빠른 곳은 2월에도 했고 대부분 3월에 했습니다. 또 대부분 지방채를 얻도록 해서, 두 번째 2관왕은 아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빛까지 얻도록 강요해가면서까지 조기집행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시차입금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총론에 한도액을 승인을 받습니다, 지방 의회에. 그러나 시행해본 적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기집행 3대 새로운 시책, 3관왕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의미를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의지, 특히 단체장의 추진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시하고 추진체계 보고 받고 이런 데는 성과가 올라가고 대응하도록 놔둔 데는, 즉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세수입 이자수입을 관리하기 때문에 100억 내외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100억 정도를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하고 국가적 시책이기 때문에 총력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체계가 구축이 되어서 1/4분기 총력적으로 추진했고 2/4분기 최종 마무리를 한 열흘 남긴 것 같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도 정부가 제시한 목표 60%를 어제부로 달성해서 지금 101%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기집행추진으로 인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극복사례, 모범적인 추진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로사항이었던 것은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아무리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의식해서 미온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집행하고 1년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1년 후에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의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기집행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책훈령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훈령은 훈령대로 제정했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유기했을 때는 인사조치라든지 더 큰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요형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매년 조기집행은 했습니다마는 범정부 차원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에 하다 보니까 절차이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1/4분기 중에는 설계하고 절차이행평가라든지 이런 절차이행 한 뒤에 4월 내지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예산집행의 시스템이었는데 1월부터 추진체계가 강력하게 독려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설계해야 하는데 설계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웠던 부분, 이 부분은 토목직공무원과 건축직, 이런 기술직공무원들과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추진했고, 그래도 또 공사규모가 크고 전문적 기술이 요하는 부분은 설계협회 전문가들까지 조력을 받아서 설계를 조기에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시차입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시차입을 하는 데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된 한도액은 908억이었는데 900억을 일시차입으로 농협으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방법은 일명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한 20일 정도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들이 900억을 일시차입을 했는데 이 일시차입은 지방채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상초유의 900억을 일시차입 한다고 하니까 전라북도가 유동성자금에 큰 문제가 생겼다, 지방채가 대폭 늘어난다 이렇게 언론이 대서특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게 진실인가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명을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설명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부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가장 큰 애로였던 것 부분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추진했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일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만 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월 중에 도지사님이 시군 연초순시를 하는데 연초순시 시에 조기집행에 대한 설명과 추진대책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해서 시장군수의 의지를 심어주기도 하고, 시군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조기집행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전국을 상대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재정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자체평가를 했고, 또 부서평가를 하는데 재정조기집행의 결과를 100점 만점에 10% 정도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휘부 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을 관철시켜 각 부서에서 평가에 더 적극성을 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건설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부실시공이 많이 우려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420여개 되는 건설업체에 김완주 도지사님의 서한문을 직접 발송했고, 또 업체의 규모가 중견기업체를 중심으로 82개 업체를 저희들이 도청에서 간담회를 하고, 조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선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 많이 받아가도록 설명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면서 그런 과정에 부실시공이 되면 결국에는 도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안 된다, 부실시공은 막자라는 협약체결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조기집행특별훈령을 제정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면책도 명문화해 추진했던 사례들을 요약해서 보면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제도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재정설계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70쪽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토대로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경기 동향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업 경기 실사가 3분기 전망치가 105로 기준치 100을 웃돌아서 하락세에서 벗어난 것을 나타냈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최고 수치로 지난 1분기, 금년 1분기 때는 60, 2분기 때 68%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3분기 전망치와 2분기 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건설경기활성화와 환율, 추가상승 및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내수가 진작되고 소비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실제로 나아

졌다 이렇게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협회와 협력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긴급입찰이나 계산계약 등 재정조기집행비상대책 조직을 통해서 업체 수주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30.6% 증가했다 이렇게 총론적인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내 종합건설업체가 637개인데 금년 5월까지 수주액은 9,251억 원으로 업체당 평균 한 13억 7,000만 원 정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한 31% 늘어난 것입니다. 또 전문건설업체 경우에도 2,243개의 업체에서 1,919억을 수주했는데 업체당 평균 한 8,600만 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0.3%가 수주액이 늘어난 것으로 설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주 물량 증가와 선금, 하도금, 직불금 지급 등에 따라서 부도업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결과, 전라북도에 건설업체 부도가 작년에는 5개 정도로 나타났는데 금년에는 2개 업체로 감소가 났었습니다.

그 설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기집행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답변이 48%로 부정적인 답변 26%에 비해 압도적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선금, 하도금, 직불금 지급권유 이러한 것들에 부담을 느껴서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또 조기집행이 가져다준 효과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이 한 37%로 가장 높았고 내수 진작이 한 21%, 고용진작효과가 9% 정도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 대비 발주물량이 늘어났다고 느끼는 체감도는 76%가 늘어났다고 공감을 하였습니다. 선금에 대한 업체의 반응은 선금수령을 업체의 자율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증서 발급했던 수수료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ESC 물가변동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산 절차가 까다롭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율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조기집행 추진 후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 하반기 수주물량이 감소될 것이다, 이게 82%로 가장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설문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개선과제가 필요한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인물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재정정책과장님께서도 하반기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하반기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확대지출이 필요합니다마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라든지 지역 업체 참여라든지 이

런 확대가 필요하고 민간 투자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정안전부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7~8월 중에 집중 지원 해 주면 대부분 특별교부세가 건설경기라든지 내수 진작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기를 앞당겨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조기집행과 연관해서 하반기 대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윤영진)

거의 발표 수준으로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실감나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교수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칭찬을 해주시되 또 비판적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채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광채기 (동국대학교)

저는 오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경제위기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히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이게 좋은 것이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부양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나치면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들, 과유불급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분명히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토론의 장이 생산적인 논의와 결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뭔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제도 개선과제라든가 교환을 도출해서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 또 다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환류하는 어떤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이런 논의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열흘 뒤면 올해 상황은 끝나는 것이고, 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예산조기집행 목표를 추진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이 상황이 종료

됐긴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제가 한 3가지 차원으로 분석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목표설정 및 접근전략이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까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연 지방재정이 경기부양효과 내지는 성장률 기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실은 과학적인 분석모형을 통해서 한번 사후적으로 분명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실제 기여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계량경제 모형에 기초한 사후 성과분석이 있고, 그것을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보로 좀 구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기집행 대상 경비범위설정 문제를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북도청 과장님께서도 토론 자료에 일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조기집행 대상 경비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지출우선순위라든가, 또 지출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올해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됐긴 합니다마는 경비집행대상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뭔가 좀 피드백 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정보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조기집행의 정책목표설정의 적정성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의 실제 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의 60%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수결손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60%라는 이 예산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데 재원이 부족한 이런 상황까지를 감내하면서 60%의 집행목표를 달성할 만한 과연 가치 있는 목표였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비판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경제위기가 진행이 되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지방정부 레벨에서 세수결손이 훨씬 큰 폭으로 발생하는 상황인데 세수결손이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 세입이 부족해서 그것을 차입으로 메워가면서까지 예산조기집행의 목표를 60%로 설정해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독려해야 될 만큼 과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지출효과가 그렇게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해서 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한번 점검 해보고,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적정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조기집행 목표설정 및 접근 전략의 적정성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정책 믹스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궁극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의 조화, 특히 조기집행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대안적인 정책수단과 적절한 믹스를 통해서 조기집행이 과잉집행이라는 이런 어떤 사항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세수부족이 생기는 상황에서 차입재원으로 사실은 조기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전개됐기 때문에 조기집행의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골라서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해나가도록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랄까 지침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노력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혹시 세출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대안적인 정책수단까지를 함께 고려해서 조기집행이 과도한 수준에서 목표책정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집행을 해나가는 정책 믹스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발표한 내용을 놓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고민이 사실은 어떻게 실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접목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작용 예방 내지는 통제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조기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목표달성을 위한 촉진제도는 많이 만들었는데 사후안전판을 만드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설계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올해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은 조기집행을 촉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예산집행절차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상시 사항에서는 사실은 검토해 볼 수 없는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제도개선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서 예산집행절차의 개선이라든가 지방계약제도 개선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실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예산절차의 개선이라든가 지방계약제도 개선이나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실행한 여러 사항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과를 평가해서 일시적인 보완대책이 항구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방예산집행 절차개선, 그 다음에 지방계약제도 개선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많은 거래비용을 상쇄할 만한 새로 어떤 그 제도개선성고가 창출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기대를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윤영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손희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손희준 (청주대학교)

반갑습니다. 청주대학에 근무하는 손희준입니다.

조금 전에 광채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지금 토론하려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전략과 성과라고 하는 이 주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곱씹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기집행의 추진배경, 또 우리가 그냥 조기집행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작년만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또 지방예산 10% 절감방안 이것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체하고 딱 맞지는 않겠지만 지방에서 받아들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 또는 그에 따른 신뢰성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산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목표하는 정책목표를 중앙과 지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성과로 나타냈다는 점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지방에 도움이나 지방으로부터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 잘 작동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이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 정책이 자꾸 널뛰기 하듯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이 정책에 있어서 지방의 요구나 지방의 바람에 의해서 과연 이것을 하게 됐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방이 별로 그런 문제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종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방에서 이런 부분까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시도합동평가위원회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실질적인 정기적인 시도합동평가까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말까지 끝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올해 어느 정도 집행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시도합동평가 같은 것은 전년도 평가 실적에 대해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 더 먼저냐 하는 데 대해서는 판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광 교수님도 말씀했다시피 지방재정의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이 경기

진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토대가 있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 물론 저희들의 뭉이기도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에 대한 순응도나 이해도 같은 것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으로부터 많이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더라도 예산항목을 가지고 조기집행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지방재정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자율성이라고 하는 보다 더 큰 가치 부분은 제쳐놓고 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간 뒤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아까 양 과장님 발표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돈을 집행해야 될 지방공무원들의 생각은 이것 지나고 난 다음에 책임은 결국 내가 져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지방재정은 사람에 있어서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움직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데 돈이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별로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데에 돈이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지출이 되는 반면에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거나 집행하는데 핏줄이 제대로 돌지 못한다면, 지금 정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경제가 중환자입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빨리 피를 돌게 해서 환자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사실은 피를 돌게 하는 심장에서 더 많은 피를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재원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방으로부터의 협조나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언밸런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꼭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조기집행이 그나마 우리 지방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따른 자금흐름이 어느 정도 매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하여 둔다면 향후에 이와 비슷한 정

책적인 판단이나 정책적인 수요가 있어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한 수단일 테니까 지금까지는 정시배정을 통해서 하던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긴급배정이나 조기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이름하에 조기집행정책에 매달려서, 그나마 성과가 나타났다면 다행스럽긴 합니다마는, 용어자체도 지방재정 집행이나 지방예산집행의 조기집행보다는 ‘적정화’나 ‘정상화 정책’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윤영진)

고맙습니다.

그럼 세 분 토론자의 토론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청중석에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몇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성 (플로어)

전라도 해남에서 온 민경성입니다.

제가 한 2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먼저 단점을 잘 파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조기집행에 대해서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시 됩니다. 6월이 지나고 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성과분석에 따른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조기집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시군을 평가해서 하위 한 6개 정도의 시군 교부세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교부세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배정기준에 위반되는 게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윤영진)

감사합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 황수진 (플로어)

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예산담당 황수진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조기집행정책으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2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생하는 데 평가기준에서 객관화 유지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즉 예를 들어보면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보조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사실상 그것은 자금도 교부되지 않았고 1차나 2차 추경 시에 이미 삭감이 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 사업을 목표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와 그렇게 된 자치단체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센티브 문제인데 사실상 이것은 전국적으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장치고 어느 담당공무원치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여건이 다 다릅니다. 또 장기사업이 있고 단기사업이 있고 예산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이월사업이 넘어와서 손쉽게 집행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헤아려서 여러 자치단체가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윤영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 토론자와 청중 두 분이 질문 겸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성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오신 공무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효과문제는 곽채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 또는 재정집행에 관한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경제위기가 도래됨으로써 일자리, 소비위축, 그리고 지금 보면 디플레이션 쪽으로 빠지는 아주 극한상황이라고 해서 환자로 예를 들면 인공호흡을 하는 정도의, 중앙집권적 응급처방으로 우리가 조기집행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것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적절하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효과는 재정집행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크게 GRDP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는 그런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은 아니고, 아까 전북에서 소비심리지수조사를 하셨는데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한 다든지 해서 이 효과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저희들이 백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곽채기 교수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이런 위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타산지석 내지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세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 어떤 평가를 해서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을 공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는데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불가능하다든지 지금 상황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보다 1회 추경, 2회 추경한 지방자치단체까지 있기 때문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6월 말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제발표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6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는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방 일선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성과를 달성한 데도 있고 또 재정 규모가 큰 애로사업을 해결해서 목표를 달성한 데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면 액수는 최대한 낮추고 또 인센티브를 받는 자치단체는 가능하면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

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채기 교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성과분석 내지는 해석, 교훈 또는 환류의 그런 자료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0% 적정선이라 하는 것은 사전에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라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그것이 데드라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새로 검증을 하는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조기집행하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출구조조정은 서로 trade off 관계에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집행하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도 큰 측면에서는 세출을 줄이지 않는 기조로 나가면서 세출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효율화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조금 전에 광채기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조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손희준 교수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작년 말부터 이제까지 이어지는 경제위기를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정책을 쓸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정책을 써가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냐 이런 정책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보면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서 강력한, 재정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조금 재정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발생했던 부작용,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하반기에는 건실화 쪽으로, 정상적인 세입세출균형을 맞춰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운영진)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 주셨는데, 조기집행문제는 원래 경기불황을 타계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정정책 수단 중의 하나로 조기집행은 중앙정부에서는 수시로 해왔던 그런 정책수단이었는데 지방재정은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좋은 경험을 했고 또 좋은 내용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제시된 게 과연 목표, 특히 성과를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북도에서 일시차입을 하다 보니까 매킨컴에서 엄청 두들겨 맞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현금관리, 자금흐름, 현금흐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현금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뭐 이런 쪽이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공부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교수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과 아울러서 예산집행제도라든지 지방계약 제도 개선도 같이 도모하면서 또 이런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될 때에 대비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박 과장님 감사드리고 세 분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중석에 계신 분들도 아주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의미 있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1세션 제1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사 회 (윤석완, 전북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제1세션 제2주제의 사회를 맡은 전북대학교 윤석완입니다.

제1세션 제2주제의 발표주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의의’ 입니다.

오늘 이 발표는 PPT를 이용해 설명하실 것 같아서 발표가 끝난 뒤에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토론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실 분 소개를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추진단 단장이신 이인재 단장님이십니다.

이인재 단장님은 행정학 박사이시기도 하시고 또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신 학구적인 견식이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좋은 발표 듣고 좋은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고 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재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추진단장)

- 주제발표 :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의의

[자료 참조]

□ 사 회 (윤석완)

발표를 해 주신 이인재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정책에 대해서 전 1주제에서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그러니까 예산이 짜여있는 것을 압축해서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재정의 내적인 확대정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희망프로젝트라는 이야기는 재정의 순증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보태서 예산 이외의 것을 더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정책은 효율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붙여도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기집행이나 희망프로젝트 의지나 그 2개는 전부 다 재정지출

을 확대시켜서 현재의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100을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지출이 100만큼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0 곱하기 승수라고 부릅니다. 그 승수가 3이면 100억이 300억의 효과가 되고 승수가 4가 되면 400억의 효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했을 때 효과는 그 파급효과는 액수의 승수 배만큼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지출의 확대정책은 경기진작의 정책으로써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모두에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우측에 있는 교수님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충남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염명배 교수님이십니다.

제 우측에 앉아계신 교수님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전임회장님이시고 현재 전북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강인재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경제통상과장님이신 윤인휴 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우선 중앙에서 하는 정책을 지방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갭이 있고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고려하여 모두에 강인재 전임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뒤에 전라남도 경제통상과장님이신 윤인휴 과장님께서 하시고 마지막에 염명배 교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10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인재 (전북대학교)

아까 앞 세션에서도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이지만 저는 전 세계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국가 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고 단시일 내로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자량은 못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자랑 중의 하나일 것도 같습니다.

제가 막상 정책결정자라도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특히 복지의 어떤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기초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미 어떤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희망근로자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내용 면에서는 제가 특별히 짚을 것은 없고 해서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하는 방법 중에서 인턴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한시적인 사업인데 저도 정부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과가 클 텐데 요즘 같은 때 정부가 왜 고용을 않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대학에서 공무원 합격하면 플랜카드가 붙을 정도로 모든 대학생들의 꿈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것은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MB가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늘이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민간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치단체 광역시군 또는 큰 시에서 고용 창출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산업단지 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 또 기존에 복지 및 농업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이인재 단장도 말씀하셨지만 자활근로사업, 또는 지역혁신 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또 지금 보육사업도 있습니다. 이번에 9월부터 바우처로 변경이 됩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사업, 중증장애인 고용사업, 후계농업경영 육성사업 등 사실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자치단체의 사업을 분류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합시다마는 지금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특히 그 아까 이야기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제가 봤더니 안경사주기 사업, 가방 사주기 사업, 수학여행 보내기 사업. 또 어떤 자치단체는 학용품 사주기 사업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통근비 주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극빈자가 아니라 약간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인

데,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활근로사업이요? 푸드사업이니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돈 그냥 그대로 주는 게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은가. 아까 이야기한 안전에도 많이 드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느끼는 사업은 앞서서도 나왔지만 IMF 때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하는 사업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과, 특히 투명성에 대해서 좀 엄격히 체크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맞는 특정한 사업을 우리가 발굴할 수 없는 건지 획일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목표를 지역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많은 중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단순히 돈을 뿌리는 사업은 길거리 가다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이라든지 발전 잠재력을 확충시키는 사업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좀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자. 그것은 뭐냐 하면 상징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는 건 뭐냐 하면 전달체계의 투명성이나 전달체계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분에 IMF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드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상당 부분은 농민들한테 가는 돈이 옆으로 새서 실제로 받는 사람하고 돈을 주는 사람하고 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 같이 이런 사업을 별로 안합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의 고용에 대한 통계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별로, 이혼한 사람들별로, 소득별로 이 사람들의 고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정책을 세우는데 상당히 유용하고 또 정책의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만 하고 나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잠재적인

인과관계를 상정하고서 하는데 저는 이런 지역통계기반 같은 것을 비용도 별로 안 드는데 이번에 좀 확충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런 쪽의 사업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각 대학에서 졸업생에 대한 취업이 대학의 평가에 반영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가짜입니다. 지금 졸업생 취업 플랜카드 붙어 있고 우리 대학은 몇% 취업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25만 명이니 몇 만 명이니 말씀하시는데 지역의 고용이 정말 실질적으로 창출됐느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측면의 통계기반을 확충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복지 분야라든지 농업분야에 돈을 많이 주는데 전달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정부에서 앞으로 좀 더 힘을 쓴다든지 인력을 확충할 수 없는가.

예를 들면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자리, 땅 파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돈이 직접 잘 전달됐는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갔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사업에 왜 일자리 창출을 못 하는지.

이번에도 직불제도 공무원들 하는 것도 호지부지 되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안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중간에 새는 돈을 세이브해서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각각의 공공시설도 그렇고 민간에 위험한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각종 시설 중에서 안전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체크해서 민간에 위험이 많은 집이나 공공시설의 위험관리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과외비는 몇 십만 원 씩 씁니다마는 하지만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난방이 잘 되는지 환기가 잘 되는지 소음문제가 없는지 애들이 몸집은 이만큼 커졌는데 의자가 작지는 않은지, 하여튼 그런 각종 시설들을 보완해서 차후에 에너지 절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 되고 있고, 또한 그 성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합적인 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집행 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여건을 이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 사 회 (윤석완)

고맙습니다.

근본적으로 민간지원보다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 지역의 성장과 잠재력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성·효과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부에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경제통상과장님이신 전라남도 윤인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윤인휴 (전라남도 경제통상과장)

저는 지자체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아마도 그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의미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드릴 말씀을 마무리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약 40개 정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희망근로로 목표를 삼고 접수를 해본 결과 1만 5,000명 정도로 140%가 넘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권장사업과 랜드마크사업 특색사업 이런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마는 아까 화면으로 보신 내용에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사업은 구례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은 목표에 19개 시군이 해당되었습니다.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사업 이것은 여수 등 9개 시군이 해당되었는데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공간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 특히 진입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수 쪽에 가면 산단이 있어서 거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선도사업을 권장했는데 저희는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한 녹색성장마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행복마을의 안길, 소공원, 꽃길 조성, 그리고 영세민 동네마당 조성, 한옥마을 정비, 쉼터 이런 사업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7개의 선도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직접 권장하는 사업이 25가지가 됩시다마는 예컨대 전통시장 청결사업, 농공단지나 공장 밀집지역 환경 정비 개선, 고인돌 유적 현황조사나 주변 정비, 그 다음에 슬로우시티 경관조성, 저소득층 집수리 연계 일자리, 인도시설 유지관리,

산속생활쓰레기 수거사업, 그리고 저희 도의 특징이 해안이 아주 긴데 해안을 따라서 바닷길, 저희는 바닷길 삼천리 조성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사업과 또 저희는 영산강 등 3대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하천쓰레기 수거작업, 그 외에도 하천제방 수리시설 배수로 개보수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군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특성으로 삼고, 완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농장 탐방로 개설이라고 해서 해안가의 갯벌, 바지락, 꼬막 이런 해산물을 채취하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장체험을 통해 관광과 소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탐방로 개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가를 양성하여 전체 50명 중에 20명을 순번제로 신비의 바닷길 등 10개소를 지정해서 거기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숙원사업 사례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순천시 같은 경우 희망근로사업장에 꽃나무를 제공한 사례가 있고, 희망근로자 중에서 농촌 일손 돕기로 약 8명 정도가 가서 소유주가 양파를 수확했고 고맙다는 뜻으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다시 면사무소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그러한 장성면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5일 안타깝게도 여수시 화양면에서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을 했는데 작업 도중에 한 분이 사고를 당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장과 여수시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서 장례를 6월 14일에 치렀고, 유가족들이 그 보답으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사례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남도바닷길삼천리사업은 저희 최북단인 영광에서부터 쪽 내려가서 광양까지 이르는 약 1,200km에 해당하는 테마 길을 '걷기 전용 1호선' 이라는 명칭으로 조성을 해서 해안길, 밭길, 모랫길, 그리고 순천에 가면 있습니다마는 갈대숲길, 그리고 완도미역 영광굴비 이렇게 특산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해안길을 훑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제 저희 사업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느낀 몇 가지 애로사항과 또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발표나 토론 때도 고령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고령자 층이 타 시도보다 높기 때문에,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조해서 예컨대 시도 시군 단위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노인건강검진, 의료용 급약품 보급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응급출동 이런 부분은 소방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시도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또 각 부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해당부처, 복지부와 소방본부하고 협조를 얻어서 시도의 관련부서에 이 내용들이 시달되어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비용 부분인데 지금 인건비와 재료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재료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할 때 들어가는 각종 작업 도구, 장비, 소모품. 예를 들면 낫이나 장갑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관련된 자재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과다하게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과연 확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부분은 저희가 한국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행수수료가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권에 대한 배송, 말하자면 조폐공사에서는 도 단위 농협까지만 배송을 해 주고 도 농협에서 시군까지는 배송을 시도에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송료도 좀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TV 광고 관련해 전국적으로 5억 정도 든다는데 이 비용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가된 비용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중앙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결국 지금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재정이 매우 열악해서 3월에 추경할 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일정도 잡기 어려울 정도로, 지방채를 검토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그 규제를 풀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좀 고민이 이런 점입니다. 지금 종전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하고 차이를 두면서 좀 생산적인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 또는 각 정부의 권장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투입되는 인력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

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처음 접해보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나무에 삼각이나 사각지지대를 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도 단순노무에 속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노하우를 좀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공사와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말하자면 생산적인 사업, 실체가 남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 자재구입, 노무인력 이런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군과 협의를 해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말씀하신 선도사업이라든가 랜드마크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비로 책정해서 경우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하면서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데서 약간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감독도 공무원이 하면서 설계를 할 때 인건비는 제외하고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 공무원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소수 기술 인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생산적인 사업을 할 때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윤석완)

고맙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돈입니다. 중앙정부가 돈 좀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염명배 교수님께서서는 시간관계상 농축해서 간단하게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염명배 (충남대학교)

방금 소개 받은 충남대학교 염명배 교수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우리 다 한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학회 회원들이 지방재정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방재정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편하게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다 통과가 되면 밖에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정당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모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단장님 발표를 듣고 굉장히 답답하면서 마음이 안쓰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죽 상황이 안 좋으면 이런 계획을 내셨을까. 우리가 위급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응급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조치나 막 취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이 당장 물에 기도가 막혀있는데 그 사람 입에다가 청심환을 집어넣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해서 안 됩니다. 급할수록 거기에 적합한 정책을 써야지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정책이 이반된 것도 단장님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발상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김양이라는 여학생이 쓴 편지가 발단이 되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 적은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서 일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멍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구멍들을 메워서 제대로 된 결과를 우리가 목적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앞의 발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결국은 국민 손에 뭐가 떨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경과 루트가 잘못되어서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기집행도 마찬가지로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절절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800조원 정도의 부동산금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돈은 많아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채널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채널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조기집행해서 돈이 기왕에 많은 데다 돈을 더 부어봤자 사실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세부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인데 제가 희망프로젝트를 보고 제가 느낀 전체적인 느낌은 타깃 이 좀 불분명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목표가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이 정책이 3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가 경제위기의 취약계층을 소득보존을 해 주겠다 하는 게 있고 그와 동시에 일자리도 같이 좀 만들어주겠다, 그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겠다고 하는 3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이 3마리 토끼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사공이 많아져서 배가 산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scope를 명확하게 해서 이번 정책은 이것만 우리가 타깃으로 하겠다. 이것저것 다 하려면 결국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cope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정책에 아주 치명적인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가 정책이 한시적으로 지금 시행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상품권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상품권이 굉장히 지역을 걱정하고 애정을 가진 발상의 결과라고 피력을 하셨지만 이게 잘못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상당히 되는 게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다 보니까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각각의 제 의견과 혹시 문제점, 물론 잘 하고 있는 점은 단장님 이하 그쪽 담당자들이 얼마나 고심을 해서 이걸 만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좋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오늘 시간상 제외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소득 계층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서 타깃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아까 앞에 두 분의 토론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무수하게 많은 어떤 방법으로 저소득층 지원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70~80개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만일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 지원 대상을 조금만 높이면 됩니다.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조금만 높이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복잡하게 일을 만들다 보니까 결과도 우리가 잘 모르겠고 일이 좀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20만 내지 25만 일자리를 6개월 만에 창출하겠다는 대단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일자리가 거의 20여만 개가 줄어들지 않았습니

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낼지는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줄어든 일자리를 6개월 동안 지금 만들어내겠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에 지원을 받아본 결과를 보면 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령 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apply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다보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해서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 만인 6월 8일 현재 신청자 중에 전국 평균 6% 정도가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가 12%로 제일 많습니다. 대구시가 9%, 부산시가 7%, 전라남도 광주시는 제가 아직 통계를 못 받아서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7% 정도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없었기 때문 단순히 옛날처럼 대충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인가 보다 하고 노령 층들이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상당히 전문적인 일도 필요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실망실업처럼 중도에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의 성격을 보면 종전에 공공 취로사업과 다른 게 뭐냐. 저는 아직도 구별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누가 결정하냐 하면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결정합니다. 내가 여기다 apply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apply 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생산적인 곳에다가 공공취로보다 더 집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갖는 자체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백두대간부터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일반 국민들이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기술자들이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 영세민, 잠깐 실업을 한 사람이라든지 노령 층이라든지 부녀자 층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 사업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공공취로사업 수준에서 돌이나 나르고 그냥 풀이나 뽑고 이 수준에서 그만 둔다면 굳이 이 사업을 새롭게 들여와서 이 새로운 사업이 이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또 거꾸로 좀 안 좋게 표현한다면 그런

사업들이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사업을 하려니까 임금이 비싸니까 이번에 그냥 싸게 한 달에 83만 원 정도 돈을 주고 그냥 싼 임금으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해보자 하는, 그런 발상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품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제의 기본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우리가 재정학이나 미시경제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정부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제일 좋겠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 수혜자의 만족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금으로 주는 방법입니다. 현금 이외에 예를 들어 상품권으로 주는 방법은 소비를 제약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소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이 상품권은 일반대형유통업체에서도 쓸 수 없고 마트에서도 쓸 수 없고 그 지역 영세 상인이 만들어내는 물건이나 재래시장에서만 쓰도록 딱 국한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꼭 그 재래시장의 물건이 필요한지 안 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재래시장 물건이 잘 안 팔리느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지, 우리가 국산품애용 운동 한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산품을 쓰게 만들려면 국산품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싸게 하면 저절로 쓰지 마라 그래도 씹니다. 품질이 나쁘고 비싼 것을 억지로 쓰게 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에 위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 상품권을 만들어서 30% 내지 50%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에서 이것만큼 반드시 쓰시오 하는 것은 원칙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아마 3가지의 종류의 상품권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 권, 5,000원 권, 10,000원 권. 그런데 사실 10,000원 권, 5,000원 권, 1,000원 권 만드느라고 위조방지은선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그 비용은 또 얼마나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새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왜 굳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또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6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원자가 많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원했을까. 과연 정부의 정책을 다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서 일을 하겠다고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IMF 때 잘 알다시피 그때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실업자를 위해서 제빵이나 이런 것을 했더니 진짜 어려운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시간 많고 놀고 다니던 아주머니들이 가서 수당을 다 받아 챙기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정책의 결과가 의도했던 것하고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제대로 체크를 하고 정책을 실시하는 건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예컨대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께 제가 애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보다 성숙한 프로젝트로 성공적으로 되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존의 그런 정책과 무엇이 차별이 되어야 되는지, 이 새로운 제도가 왜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이 새로운 제도가 들어가면 누가 어떤 대책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요약을 해달라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정도로 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윤석완)

요지는 이게 맞다, 맞는데 조금 더 타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점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 같았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플로어에서 이 내용에 대해 말씀을 꼭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일어나서 소속을 말씀해 주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승순 (플로어)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근무하는 예산담당 임승순입니다.

저희 광산구청은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이 110억 예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재료비가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예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작습니까?” 그러니까 20%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침이 있

다고 주무부서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10억이니까 20억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8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주무부서의 답변이 그랬습니다. 일단은 인건비 속에 5대 보험이 있는데 건강보험이나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 해서 이런 5대 보험이 모두 재료비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료비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 20%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은 그분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목적은 달성하지만 실지 내실 있는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없다고 제 입장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요즘에는 단순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 재료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검토하고 계신지,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 30% 정도는 재료비가 거기에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범주가 되어야지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서 성과창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5대 보험은 인건비성으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료비는 어디까지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삽을 사든 낫을 사든 그 재료를 사는 순수한 재료비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기준을 두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6월이면 저희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5개월 이상 남았는데 자치단체의 이런 건의사항을 잘 받아주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윤석완)

광산구청 예산과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한 분만 더 해 주십시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중요한 포인트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이인재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추진단장)

제가 그저께 저녁에는 ‘김미화의 세계는 지금,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에서 토론했고, 어제 오늘 아침에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에서 토론을 했는데

시간의 한계효용을 따져보면 여기 왔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조금 늦더라도 이야기는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 계신 토론자들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염명배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여러분들께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파워포인트 작성은 사실 오늘 이 자리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옛날 우리 장관께서 대통령 앞에서 토론 자료로 지금부터 한 달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제가 조금 고쳐왔습니다. 그런데 김양의 편지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고 뭔가 도입부분이 주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양의 편지 부분을 제가 원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김양의 편지 하나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교수님께서 정부 일을 별로 안 해보신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전공이 뭘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미시 부분 쪽에 가깝고 어떨 때는 거시 부분에 가까운 것 같은데 혹시 미시전공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주로 미시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미시적으로 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신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소위 新빈곤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薪빈곤층이 생겼을 때 사실 그 단어를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新빈곤층이 다수 발생했을 때 많은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재정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의 가까운 데 예를 들어보면 돈을 뿌렸습니다. 일본도 20 몇 만원씩 뿌려보고 중국에서도 옛날에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을 뿌려봤는데 돈을 뿌렸더니 이분들이 여행을 가요. 차라리 국내로 가면 좋은데 가까운 또 외국으로 가요. 그래서 돈이 다 다른 데 쓰였습니다. 돈 살포도 헬기로 돈을 뿌려도 재정정책에 소위 경제이론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웰페어도 하방경직성이 있습니다. 웰페어를 받아본 사람들은 나중에 그거 안 주면 작동이 안 됩니다. 하방경직성이 있습니다, 소비처럼. 그래서 웰페어를 줬을 때는 정말 열심히 생각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워크페어로 간 겁니다. 웰페어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워크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3,000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시간에 법상 최저임금이 4,000입니다. 그러면 $4 \times 8 = 32$ 이면 1,000원 남지요? 그거는 상품권을 줄

때 인센티브용으로 상품권 쓸 때 불편하실 테니까 1,000원 더 보태준 겁니다. 그래서 33,000원이니까 첫 출발 scope가 정해진 것입니다. 한 달에 830,000원 짜리 정책을 세웠는데, 다시 말해서 하루 일당 33,000원 짜리를 세웠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명배 교수님께서서는 타깃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차라리 차상위계층까지 복지지원을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단순하게 워크페어를 우리는 정책 처방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만개에서 무슨 중도포기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IMF 때와 비슷한 상황 이기는 하지만 돈을 쓰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 광산구청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재료비가 25%인데 실질적인 재료비는 12%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당시 프레임워크 자체가 복지 쪽으로 출발을 하다가 워크페어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4대 보험 같은 것이 지금 재료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도 지금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대폭 올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12%가 쓰인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일이라는 게 노동 강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 반반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담배꽂초 줍는데 장갑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거의 제로라고 보고, 그 사업하고 똑같은 규모에다가 더하면 24%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해 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3분 1 정도는 그럴 만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재료비가 적은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효율적으로 한 쪽에 몰아서 소위 집중화 선택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사업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산적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품권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비자주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소비자주권은 돈이 가져왔을 때 자기가 벌었을 때부터 쓸 때의 문제이지 돈을 번 소위 고용계약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단은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을 고쳤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률가들도 약간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냥 이론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시행령을 고쳤는데 고치면서 어떻게 고쳤냐면 기본적으로 현금을 주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으로써 실업대책을 해야 할 경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소위 재정정책을 써야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득하여 현금 이외의 것으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시지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올 때 신청서 쓸 부분에 다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주권은 돈을 벌고 나서 쓸 때 우리가 제약을 하면 모르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상품권이라는 것을 저는 상당히 이번에 성공을 하면 저는 가장 아름다운 정책 툴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상품권을 흔히 재정정책을 쓸 때 상품권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푸드 스탬프도 stigma effect가 있잖아요, 소위 낙인효과. 흔히 재정정책을 쓸 때는 돈 없는 취약계층에다가 뭔가 주는 입장이라서 쓸 때 떳떳치가 않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품권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인 도안을 써서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 사주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근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 상품권은 극히 일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상품권 플러스 기프트카드까지 합쳐서 3,800억이 이번에 쓰여 질 텐데 6개월 동안, 그동안 재래시장 상품권 10년 동안 했는데 그것보다 150%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써야 되는 소위 상품권의 규모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품권을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다른 것들 자잘한 상품권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그 상품권의 의미를 고양을 시켜 보자.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에서 상품권이라는 제도를 쓸 때 상품권에 대한 stigma effect, 낙인효과를 없애보자는 숨겨진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3,000원, 32,000원 이야기했는데 정책의 타깃이 애매하다는 부분은 제가 복지부의 복지정책이 70~80가지가 되고 노동부에서 아까 또 강인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또 지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또 엄청나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정책을 써야 될 분야가 굉장히 없습니다. 없는 데서도 그나마 찾고 찾아서 이번 희망 프로젝트에서 타깃은 명확합니다. 물론 우선 타깃인데, 일단 소득은 차상위계층 이하이고 재산은 1.35억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1.35억을 잡은 이유는 1.35억 이상인 긴급복지라는 한계선을 그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용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

런 또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고 그 내부에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지금 정부정책의 수혜자들은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고 그건 시스템적으로 일모아 시스템에 다 이름이 리스트 업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깃은 분명한데 다만 이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언급을 할 때는 소득인정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득인정액은 우리가 근로소득 플러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국에 걸쳐서 탕 투기를 해서 돈이 많다고 그러면 각 지방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알아내거나, 또 금융재산 알아내려면 실명제니 무슨 법상 알아내기 엄청 어려워서 행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재산부분은 약간 풀어놨습니다. 좀 터놨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돈 많은 사람이 무슨 하루에 33,000원씩 받고 일을 하겠느냐.

또 거기다가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었냐면 시골에서는 집이 1억짜리 하나 있고 2억의 금융재산이 있어서 은행에서 이익을 얻어내는데 재산으로 보면 3억인데 서울에서는 20~30평짜리 20년 동안 일해서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것은 재산으로 따지면 훨씬 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잃었어요. 재산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5~6억이고 이 사람은 3억인데 지금 위에 타깃은 실직자 휴폐업자가 우선 선발 대상자이기 때문에 재산만 가지고 잣대를 또 획일적으로 해결점을 잡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 타깃은 분명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비슷한 부분들은 생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강인재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슨 사업을 그렇게 니네들 마음대로 하느냐, 차라리 민간에 맡기든지 지역에 맡겨라. 지역특화발전 해서 잠재력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역특화발전 특구도 있고 지역전략산업도 있고 잠재력 R&D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우리가 1조 7,000억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 같지만 우리나라 GDP가 지금 1,000억은 아직 덜 났지만 그중에서 예산이 대략 잡아서 3분의 1이라고 쳐보십시오. 1조 7,000억보다도 훨씬 더 나은 돈과 재정이 R&D라든가 잠재력을 확충하고 특화 발전

을 하는 사업 쪽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응급처치 하는 이걸 별도의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성 있는 사업과 복지, 농민 이런 부분들이 부처 간에 너무 중복이 많고 낭비가 많다. 이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저도 이 사업을 구상하고 지침을 만들면서 복지부에 이야기해 봐도 공무원들도 너무 복잡해서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이번에 소위 청와대에서 한번 크게 이슈화시켜서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작업을 지금 거의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통계가 부족하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지역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히 필요하신 부분인데 이걸 정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시군구 단위로 GRDP가 나옵니다. 물론 GRDP의 효용을 떠나서 지금까지는 통계청에서 내놓는 시도 단위의 GRDP가 나오는데 시군구 단위 GRDP가 조금 가난한 데에서는 하지 말자는 이론도 많았었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우겨서 2년에 걸쳐서 시작해서 내년에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지역통계 많이 신경 쓴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 부분, 앞으로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지자체별로 똑같은 것, 노인 회관 짓고 복지회관 짓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복이 많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지자체가 통합이 안 되게 되면 그것이라도 통합을 해보자. 소위 common 인수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아는 데가 무진장이라고 쳐봅시다. 여기 함평하고 나주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기왕이면 복지회관을 하나씩 따로 짓는 것보다 합쳐서 2.5배의 예산을 가지고 중간에 좀 더 크게 지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조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이 진행 중이긴 한데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부처별로 특히 지난 정부 때 정부정책의 평가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서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신 교수님도 행정안전부 평가위원 이시니까 장관 주최로 해서 평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인후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단 랜드마크 사업도 다 하고 있고 또 전국 사업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도 사업 25개라고 그랬는데 참 제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creative하게 일을 구상했다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령자 비율 높은 것은 인정하면서 이분들의 안전관리 세심하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 제가 당장 가서 복지부하고 소방본부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상품권발행 부분, TV광고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광산구청에서 말씀하신 부분, 또 생산적 사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부분, 이것은 재료를 올려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재료가 비록 적지만 어떻게 쓸 수 있는가는 제가 길은 마련해놨다고 그랬지요? 진짜 제대로 된 사업 하나 하면서 제가 자꾸 랜드마크 사업, 전국공통사업, 시도사업, 시군구특화사업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씩 골라서 제대로 하고 나머지 이런 취로사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로가 왜 필요 없습니까? 앞으로 한 열흘 있으면 비가 많이 올 텐데 지금 맨홀뚜껑 청소하고 빗물받이 청소해놓으면 여러분 도민들 시민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공익적 사업인데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얼마만큼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사업의 여부.

그래서 기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재료비에서 정부는 1인 단가의 80%를 제공하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너럴하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는 부분을 모두 인식했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지만 제가 아직 공표는 못 합니다. 아주 대폭 재료비 인상해서 우리가 6개월 후에 여러 가지 참 열심히 했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사 회 (윤석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다면 앞 세션 1분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의 안정화기능, 경기의 조정기능은 중앙정부의 주된 기능이지만 지방정부는 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 하에서 이런 경기조정정책을 같이 할 때에 재정의 안정화 정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깊숙하게 침투되어서 같이 조율될 때에 이 재정지출의 확대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인재 단장님, 토론자님, 또 플로어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1세션 2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